

#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0
----------	------

제출연월일 : 2021.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행안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20. 8. 25.공포)에 따라 개정 내용과 일부 조문을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 나.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심사 대상 추가(안 제3조)
- 명칭 변경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 심사대상 추가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면책 건의
- 나. 적극행정위원회 인원 확대, 위원회 운영 개정(안 제4조)
- 인원 확대 : 9명 이상 15명 이하 ⇒ 9명 이상 45명 이하
  - 매 회의 : 전문성을 갖춘 위원 8명 이상 구성
- 다. 현행 조례 일부 규정을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보완(안 제3조~제4조)
- 적극행정 위원회 기능 나열 및 심의방법 보완
-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근거 마련(안 제11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문 (2020. 8. 25.)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1. 5. 28. ~ 2021. 6. 17.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을”을 “위원장”으로, “15명”을 “4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하남시 관련 공무원
- 2.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정책기획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박 춘 오
	팀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최 현 숙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최 세 영 (790-598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u>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u>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 ----- 적극행정위원회----- -----.</u>  1. <u>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u>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u>  3. <u>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u>  4. <u>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u>  5. <u>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u>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양성평등</u>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u>위원장</u> ----- <u>45명</u> ----- ----- ---- <u>한다.</u>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관련공무원

<신설>

2. 3.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1. 하남시 관련 공무원

2.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위원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  
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  
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  
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  
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0. 8. 25.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 요구 등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상급기관 감사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을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위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개정내용

제10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적극행정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이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15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부여“를 “부여.“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